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4 2차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

- ① 고등경찰 ② 예방경찰 ③ 질서경찰 ④ 협의의 행정경찰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문제의 포인트는 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작용이다.

① (X) 고등경찰

→ 보호법익에 따른 구분 - 프랑스에서 보통경찰과 고등경찰을 구별한 것에서 유래 22 경간

보통경찰	고등경찰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4 1차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24 1차

② (X) 예방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구분 13 승진, 18 3차, 20 특채, 21 2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의 진압은 예방과도 관련된 개념이다.

예방경찰	진압경찰
범죄나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경찰보다는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주로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 → 권력적 수단도 사용함	이미 발생한 범죄나 위해의 제거를 위한 것으로 주로 권력적 수단을 사용, 사법경찰과 범위가 일치
총포화약류 취급제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조치, 순찰활동 등 11 1차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사살, 범죄의 수사, 피의자 체포 등

③ (O) 질서경찰 - 보기에서 강제력을 수단으로 보통경찰기관이 하는 경찰활동을 말하고 있으므로 질서경찰에 해당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강제력 사용 유무)에 따른 구분 →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 시에만 의미가 있음 12 1차, 13 경찰특공대, 18 3차, 19 승진, 21 2차, 22 경간

질서경찰	봉사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	서비스, 계몽, 지도 등을 통해 비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

권력적인 명령·강제 - 범죄수사, 다중범죄 진압, 통고처분 08 경간	비권력적인 서비스 - 방법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방법순찰, 수난구호 등
--	---

④ (X) 협의의 행정경찰 - 보통경찰기관이 하는 작용이 아님

→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06·07·11·12 1차, 13 승진, 18 3차, 18 법학특채, 21 2차, 21·23 경채, 22 경간

(이론상, 강학상)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① 다른 행정작용 동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작용 - 생활안전, 풍속, 교통, 경비경찰 등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함	①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작용 - 건축, 산림, 위생, 공물, 경제, 철도경찰 등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X, 실질적 의미의 경찰O ③ 협의의 행정경찰은 오늘날 제도적으로 경찰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21 경채

정답 ③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 ④ (X) 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④

3. 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조사단계(Scanning)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다.
- ② 분석단계(Analysis)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 ③ 대응단계(Response)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 ④ 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결과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 ④ (X) 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과정(결과X)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조인성 경찰학 기본서 Ver 1.0 P 458 문제해결과정 (SARA모형) 20·23 2차, 20·22 경재, 21 경간

- 학자 : 에크와 스펠만

조사 (scanning)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근원적(일회적X)으로 발생하는 지역 내 문제를 확인, 찾아내는 문제의 범주를 넓히는 과정(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X)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분석 (Analysis)	문제의 원인과 효과를 파악하는 단계(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단계가 필요한 단계) 각종 통계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당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대응 (Response)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단계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평가 (Assessment)	대응책의 적절성 여부 평가하는 단계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답 ④

4.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행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리

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 ② 경찰조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혹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조직성이라 한다.
- ③ 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의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장비 확보, 초동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 ④ 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 ③ (X)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 중 **돌발성**에 대한 설명이다.

→ 경찰조직의 일반적 특성

1. 위험성

경찰의 업무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며, 무기휴대가 허용된다.

2. 기동성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요구된다.

3. 돌발성

경찰활동의 대상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권력성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찰을 멀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 정치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6. 조직성

위험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반행정기관과는 다른 강화된 형태의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 요구된다.

7. 기타

고립성, 보수성 등이 있다.

정답 ③

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24 2차

- ①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②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③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 ④ 범죄피해자 보호

해설

[경찰행정법]

- ④ (X) ① ~ ③번 규정은 2018년 이전에 규정된 것이고,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은 2018년 4월 17일 이후 추가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의2에 규정되어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상위개념 15 지능, 15 3차, 19 1차, 21 2차, 23 경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피의자보호X)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질서유지X)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방지X)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피의자보호X) 3.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질서유지X)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방지X)

정답 ④

6.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④ 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② (X)

법원	법원에서 경찰권은 재판장에게 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 개정 전후를 불문(개정전에 한하여X)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은 재판장(경찰서장X)의 지휘를 받아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를 하여야 한다. 17 경간, 17 승진, 19·23 경간, 22 1차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	--

정답 ②

7.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 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를 마련한다.
- ② 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 ③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 ④ 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① (X) 경찰의 기본이념 중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 경찰의 기본이념 (기본이념 중에 활동주의는 없음)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11 승진

1. 민주주의 11 승진

-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2차
-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1) 대외적 민주화 방안 21 경간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책임의 확보, 행정절차법을 통한 절차참여 등이 있다.

(2) 대내적 민주화 방안

경찰 내부의 적절한 권한분배, 경찰 개인의 민주적 의식 확립 등이 있다.

2. 법치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법령X)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11 승진, 21 경간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11 승진

정답 ①

8.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 ② 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 ③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 ④ 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② (X)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는 흑색부패에 대한 내용이다.

→ 학술상 부정부패의 개념 정의(하이덴하이머의 분류)

1) 부패의 정의 22 경제

관직중심적 정의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는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시장중심적 정의	고객들은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려고 하여 부패가 일어난다. 23 2차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하여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일어난다.

- ① 부패행위는 돈,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위, 영향력, 위신, 장래의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행해짐
- ② 부패행위로부터의 이익은 행위자, 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조직 등에 귀속됨
- ③ 부패행위는 권위의 남용뿐만 아니라 권위의 적절한 사용의 형태로도 이루어짐

2) 부패의 유형

백색부패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 ex) 경기가 밑바닥 상태인데도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회색부패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말한다. 백색부패와 흑색부패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형으로서 얼마든지 흑색부패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 ex) 정치권에 대한 후원금, 떡값 같은 적은 액수의 호의표시나 선물 또는 순찰 경찰관에게 주민들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과일
흑색부패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ex)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정답 ②

9.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건 전시행정이야'라고 비웃었다. 평소 그는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 ① 의사결정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 ② 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 ③ 상사와 부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의하달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한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② (X)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냉소주의에 대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맥그리거의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X이론에 입각한 인간관에 대한 내용이다.

→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10·11·14 승진, 11 1차

구분	냉소주의	회의주의
대상	불특정 대상	특정대상
의심	합리적 근거 없이 의심	합리적 의심
개선인지	개선인지X	개선인지O
해결방안	Y이론에 따른 조직관리, 의사결정이나 대화에 참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공통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함
-----	---------------

정답 ②

1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③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④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 ③ (X) 공무원 자신이(자신의 배우자가X)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알려서는 아니 된다X). 11 경간, 22 1차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17 승진

정답 ③

1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 ② 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 ③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

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④ 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 ③ (X) 활동성의 활성화(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10·11·12·18·24 승진, 12·13·15·19·20·23 1차, 12·13·16·20·21 경간, 22 2차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 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표지판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 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파손 시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정답 ③

12.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24 2차

- 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② 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이라는 갈등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갖게 되고,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 ③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④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 ① (X) 허쉬(Hirschi)의 사회적 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과정원인론**에 해당한다.
- ② (O)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구조원인론**에 해당한다.
- ③ (O)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구조원인론**에 해당한다.
- ④ (O)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구조원인론**에 해당한다.

▶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

사회구조 원인	아노미(긴장)이론, 문화전파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마르크스주의이론
사회과정 원인	사회학습이론(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 차별적 강화이론, 중화기술이론),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 견제이론, 동조성 전념이론), 낙인이론

정답 ①

1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 2차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동을 널리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범죄예방활동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협력해 주도록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된 사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경찰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치안유지를 위한 각 기관들의 정보취합과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업무 처리 방식의 틀로 사용하고, 사건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기법을 사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이다.
㉣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은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의 개발, 검토, 활용을 위해 경찰관 및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접근방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경찰학의 기초이론]

설문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이다.

㉠ (X) 지역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에 대한 설명이다.

㉡ (X) 정보 주도적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1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①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②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③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④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해설

[한국경찰의 역사]

④ (X)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X)

정답 ④

15.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 2차

① 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이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④ 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다.

해설

[비교경찰론]

① (X) 일본경찰은 수사의 개시 및 진행권을 가지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다.

③ (X)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은 주 소속 수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④ (X) 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극단적인 자치경찰 체제를 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지방경찰(주 경찰X)**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16.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해설

[경찰행정법]

- ③ (X) **필요성(적합성X)**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X)**이라고도 한다.

→ 비례의 원칙

세부원칙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19 채용, 20 2차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06 채용 ③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19 채용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경찰은 ‘대표로 참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법언은 상당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 23 1차 →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려면 세부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정답 ③

1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③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④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 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 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해설

[경찰행정법]

- ① (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X),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④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정답 ①

1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 경우 판례에 의함)
24 2차

- 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 ②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 ③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 ④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해설

[경찰행정법]

- ④ (무효X)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 조인성 경찰학 기본서 Ver 1.0 P 332
- ① (무효O)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 ② (무효O)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③ (무효O)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정답 ④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2차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②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③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해설

[경찰행정법]

- ① (X)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23 1차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3 1차

- ② (X) 조건(기한X)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③ (X)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④ (O)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정답 ④

20.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 2차

- ① 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설

[경찰행정법]

② (X)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X)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X)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청문(공청회X)**의 개최사유이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23 1차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당사자 신청 필요X)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3 1차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23 1차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①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 ④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행정학]

-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②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③ (X)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공공기관X)이 부담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④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정답 ③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④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경찰행정부]

- ② (X)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감경한다X)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0조 제1항

정답 ②

23.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 경과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④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경찰행정법]

④ (X)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2 1차, 16 2차, 16 특채, 24 승진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18 승진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8 승진

정답 ④

24.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4 2차

- ① 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 ② 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 ③ 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 ④ 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해설

[경찰행정부]

- ③ (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X) 중 수사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제4조 (경찰의 사무)	<p>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22 2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

	<p>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p> <p>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p> <p>②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 제2호 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정답 ③

25.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4 2차

<p>㉠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p> <p>㉡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p> <p>㉢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p> <p>㉣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경찰행정학]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공개할 수 있다X)

㉡ (O)

사전통제	행정절차법(청문,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등),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정보공개청구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사후통제 14 특공대	사법부	사법심사(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입법부	국회의 예산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 등
	행정부	행정심판, 징계책임,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등

㉢ (X)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나, 국정조사·감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다.

㉣ (X) 「경찰감찰규칙」 제30조 제1항에서는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감찰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제30조(영상녹화)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③

2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 ④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① (X)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X)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식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②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해설

[경찰행정부]

③ (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7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X)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③

2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 2차

-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④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경찰행정부]

① (X)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행정기본법X)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있다X)**(일반적인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③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행정안전부X)**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 ④ (X)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X**)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정답 ②

29. 정책결정자가 문제상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24 2차

- ① 합리 모델(Rational model)
- ② 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 ③ 엘리트 모델(Elite model)
- ④ 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해설

[경찰행정학]

① 합리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 정책결정모형의 종류 22·24 경간

합리모형	<p>①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따르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하면서 정책결정자는 “전지의 가정”하에 모든 문제나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p> <p>②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나, 정책결정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정보와 대안을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p>
만족모형	<p>①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 대안을 선택한다.</p> <p>②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만족 정도를 결정할 객관성이 없다.</p>
쓰레기통모형	<p>① 정책결정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p> <p>②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우연히 한곳에 모여지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3 경간</p> <p>③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무정부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이며 위계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적용된다.</p>
엘리트모형	<p>① 정책이 통치 엘리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소수의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은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p>

정답 ①

30.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4 2차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 ①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 ② 부하들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참모 및 계선조직이 부하들에게 유익한 자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경과 제도를 통한 특정업무의 세분화 및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 ④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해설

[경찰행정학]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의 원리는 ④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 ① (X) 계층제에 대한 설명이다.
- ② (X)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③ (X) 분업·전문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31.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 2차

- ① 개방형 충원체제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등용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 ②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 ③ 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 ④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한다.

해설

[경찰행정학]

- ① (X)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적(개방적X)** 충원체제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등용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 ② (X)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불리X)**한 제도이다.
- ③ (X) 직업공무원제도는 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계급제(직위분류제X)**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정답 ④

3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 ③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써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해설

[경찰행정학]

- ① (X) **품목별예산제도(영기준예산제도X)**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제도로 감축관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①

33.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24 2차

-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① ㉠(O) ㉡(O) ㉢(X) ㉣(X)
- ② ㉠(O) ㉡(X) ㉢(O) ㉣(X)
- ③ ㉠(O) ㉡(X) ㉢(X) ㉣(O)
- ④ ㉠(X) ㉡(O) ㉢(X) ㉣(O)

해설

[경찰행정학]

- ㉠ (O)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 ㉡ (O)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의2 제2항
- ㉢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즉시 회수해야 한다X)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제4호
- ㉣ (X)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탄약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타 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 제3호

정답 ①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는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경찰행정학]

④ (X)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그 협의가 있는날X)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17 경간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X)

정답 ④

3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2차

- 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옷돈을 받고 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① (X)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X)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② (O)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주거 불분명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현행범 체포	형소법 제214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① 통고처분 가능 ② 현행범체포 불가능 다만,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함
	60만원 이하	① 통고처분 불가능 ② 원칙적으로 주거 불분명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

③ (O)

범칙자	범칙자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외자 18 경간, 19 법학	① 18세 미만인 사람 19 송진 ②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③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2 경간, 23 송진

④ (O) 통고처분제외자(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36.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4 2차

-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등에 악용한다.
-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다.
- ㉢ 미량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코데인 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 ㉤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쉬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3개이다.

㉠ (X) GHB(물뽕)에 대한 설명이다.

㉢ (X)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4 2차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 (X)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수사단계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X)

㉡ (O)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X)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법무부장관X)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X)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그 법률에 따른다X)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②

38. 다음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규정된 장소를 모두 고른 것은?(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24 2차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 ㉢, ㉤이다. ㉠, ㉣은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노상주차장은 제외)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p>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p> <p>④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p> <p>⑤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p> <p>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p>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p> <p>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p> <p>⑦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p>⑧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p>	<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p> <p>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	---

정답 ③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2차

- ①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 ②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 ③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④ 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 ① (X)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X)
- ② (X)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 및 심야로(주간과 야간으로만X)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 ④ (X) 1인 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40.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 2차

- ①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②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해설

[분야별 경찰활동]

- ① (X)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이 적용되므로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③ (X)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공조는 임의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④ (X)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도 존재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없다.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의의 및 특징

- 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 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수사기구이다. 11 2차
 ② 따라서 체포나 구속 등에 관한 권한이 없다. 09 경간
 ③ 인터폴 헌장은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므로 외교적 서명이나 정부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인터폴 운영경비는 회원국의 단위별 부담금에 의존한다.
 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간섭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경제적X) 09 경간, 14 승진, 18 법학
 ⑥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2차
 ⑦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11 2차, 18 승진

정답 ②

[출제분포]

단원		문제 수	문제번호
총론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1, 2, 3, 4, 6, 7, 8, 9, 10, 11, 12, 13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2문제	14, 15
	경찰행정법	11문제	5, 16, 17, 18, 19, 20, 22, 23, 24, 27, 28
	경찰행정학	8문제	21, 25, 29, 30, 31, 32, 33, 34
각론	분야별 경찰활동	7문제	26, 35, 36, 37, 38, 39, 40

[총평 및 공부방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남경기준 70점 ~ 75점, 여경기준 75 ~ 80점이면 합격기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각론 문제와 총론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체감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되어 난이도 자체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순경채용시험에서도 역시 최근 출제경향에 따라 두문자 위주의 단순암기식의 문제보다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바꾸기나 숫자문제와 같은 암기력을 요하는 문제,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 출제는 지양하고,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나 기출변형 형태의 문제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출문제집만 달달 눈에 바르고 시험을 쳐서는 힘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출은 합격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기출을 소홀히 하셔서 절대 안 됩니다.

기출은 방대한 경찰학의 범위를 정해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출문제집은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고민하시는 일반행정법 분야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법 과목이 따로 있는 경위공채(간부)시험과 달리 순경채용에서는 일반 행정법 분야의 판례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다만,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이 아닌 중요판례 위주로 양을 절대 줄이셔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일반행정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행정법입니다. 수업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일반 직렬의 지문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과 우리 시험에 나올만한 지문들을 기본서(Ver 1.0)와 기출문제집에 고심하여 수록하였고, 선별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번 문제처럼 무효와 취소 문제도 문제풀이 특강 등을 통해 많이 훈련했던 부분들입니다. ④번 지문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도 수업 때 모두 다루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에 당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각론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범위와 기준은 기출입니다. 하지만 각론은 기출 범위에서도 과감하게 거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행정학 파트나 경찰학의 기초이론(범죄학, 지역사회경찰)파트를 공부할 때에는 단순 암기식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법학처럼 딱 떨어지는 지문들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이해를 위주로 생각을 해가며 공부하자고 수업 때 늘 말씀드리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하는 말씀]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관계로 강사인 저도 앞으로 더 겸손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잘 가르쳤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특히 제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주는 전주행정고시학원, 송파 미란다 경찰학원, 수원 삼일공고 수험생들에게 많이 적중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